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해운·조선·물류·수산 최고위과정

재미있는 회계와 세무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2023년 5월 31일

1. IFRS 전면 도입 14년 ... 韓 회계, 국민 신뢰 얻었나

매일경제 2023년 4월 5일자
「IFRS 전면 도입 14년 ... 韓 회계, 국민 신뢰 얻었나」

- 투명성 개선 기대했지만
 - 회계에 대한 신뢰 낮았던 韓
 - 2001년 '엔론 사태' 터지며
 - 美 회계기준 허점 드러나자
 - 유럽식 IFRS 전면도입 추진
- 신뢰도 되레 바닥권 수모
 - 韓, IMD 회계투명성 평가
 - 지난해 63개국 중 53위 그쳐
 - 2012년부터 8년간 유지한 유럽 회계기준 위원직 잃어
- 중요한 문제들 해결 못해
 - 지주사 지배구조 판단 제각각
 - 우유부단한 행정 탓에
주요 용어조차 아직 통일 안돼
 - 횡령 같은 사고 방지책도 허술
- 무리한 적용 재고할 필요
 - 국가별 환경과 안 맞는 기준 지나치게 강요하는 건 부당
 - 국제적 원칙의 방향은 지키며 맞춤형 기준 만드는 게 합리적

1. IFRS 전면 도입 14년 ... 韓 회계, 국민 신뢰 얻었나

12월 말 결산법인 주주총회가 끝나면서 법인세법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신문 공고가 줄을 잇는다. 일부 연결 대상 회사는 두 개의 표를 공고하는데, 그 명칭이 제각기 다르다. 삼성전자는 '연결재무상태표와 별도재무상태표'이고, 제일모직은 '연결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다. 삼성물산은 괄호를 첨가해 '연결재무상태표(연결대차대조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로 표시한다. 연결 대상이 없는 계열사는 '재무상태표' 하나만 공고한다. 삼성 계열사끼리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명칭을 표시해 매우 혼란스럽다.

기업 회계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에서 주주와 경영진의 재무적 책임을 가리는 시스템이다. 회계 기준은 잣대나 저울 같은 측정 수단이지만 물리적 척도가 아닌 전문가의 합의로 정하는 룰(rule)이다.

주식회사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주주의 폭넓은 참여로 거대한 자본을 제대로 형성한 나라는 미국이다. 신대륙 개척에 발맞춰 철도, 전기,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거대한 주식회사가 출현했고 독립적 회계감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제도도 출범했다.

회계 기준은 미국 공인회계사회가 1948년부터 제정하기 시작했다. 1973년에는 증권감독기구와 미국 회계학회 주도로 상설기구인 재무회계기준심의회(FASB)를 구성했고 상근직 위원 7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기준 제정에 나섰다. 같은 해 영국 런던에서는 유럽 회계 전문가들이 모여 비상설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를 결성했다. FASB는 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규칙 중심의 기준서를 발간했고 세계 각국은 이를 참조해 국가별 회계 기준을 제정했다. FASB보다 재원과 인력이 극히 열세였던 IASB는 원칙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의 보고서를 발행했다.

1. IFRS 전면 도입 14년 ... 韓 회계, 국민 신뢰 얻었나

실무계 문제에 일일이 대응하는 규칙 중심의 미국 기준은 2001년 엔론 사태에서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범위를 정하면서 주식회사가 아닌 특수한 형태(SPC 등)는 연결 대상에서 제외된 규정이 문제였다.

엔론의 최고경영자(CEO) 제프리 스킨링은 SPCL를 다수 설립해 유전 개발 등 고위험 투자에 활용했다. 연결 범위에서 제외되면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실이 예상되면 적절히 감액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했다. 이익을 부풀릴 요량이면 값이 오른 SPCL를 골라 매각하고 손상은 숨겼다. 성공한 SPCL는 매각해 이익을 늘리고 실패한 SPCL는 원가 그대로 계상하는 조작을 계속하다가 내부 고발로 거대한 부정이 드러났다. 부실 감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감지한 감사법인 아서앤더슨은 감사 파일을 불법적으로 파기해 증거를 없앴고 결국은 회사와 감사법인의 동반 파산과 형사처벌로 끝났다.

기준을 일일이 설정한 것이 오히려 화를 키운 부작용으로 노출되자 원칙적 방향 설정을 강조하는 IASB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너무 낮아 걱정이던 한국도 발 빠르게 나섰다. 노무현 정부 금융위원회는 2006년에 'IFRS를 2010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IFRS에서는 연결회계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미국 기준을 중심으로 연결을 다룬 국내 교과서는 다시 써야 했다.

1. IFRS 전면 도입 14년 ... 韓 회계, 국민 신뢰 얻었나

필자와 신현걸 건국대 교수 등이 공저로 2009년에 'IFRS 고급회계' 초판을 발행했는데 IFRS 연결 기준이 미국 기준보다 매우 추상적이어서 집필에 애로가 많았다. "저자들의 견해로는"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첨가됐다. 각 나라에서 IFRS 연결회계 책을 수배했지만 호주에서 발간된 교과서 한 권이 전부였다.

미국과 유럽의 지배회사는 종속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50%씩 출자하는 공동 사업과 낮은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는 종속회사로 보지 않는다. 한국은 순환출자를 정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유도하면서 30% 이상 지분이면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로 인정했다. 노무현 정부 끝 무렵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지분이면 지주회사로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연결 단계에서 지배력 판단이 문제 되는 사례가 속출했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IFRS 연결에서는 지배회사로 보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 (주)LG는 LG전자와 LG화학, (주)SK는 SK이노베이션 지분을 33% 정도 보유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다. LG는 두 회사를 모두 연결 대상에서 계속 제외한 데 비해 SK는 계속 포함한다. LG는 50% 미만 지분은 지배력이 없다는 판단이고 SK는 30%대 지분율도 지배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필자에게 굳이 이유를 묻는다면 작고한 구본무 LG 회장의 겸손한 성품을 거론할 수밖에 없다. LG와 SK의 외부감사를 교대로 맡는 대형 회계법인은 때때로 달라지는 연결 대상 지배력 판단 논리를 둘러대느라 고생이다.

1. IFRS 전면 도입 14년 ... 韓 회계, 국민 신뢰 얻었나

연결 절차를 밟기 전의 지배회사 고유 재무제표를 별도재무제표라고 한다. 별도재무제표에서 '별도'는 빼고 그냥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회사도 많다. 연결 대상이 없어 재무제표가 하나뿐인 경우와 혼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법에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가 없고 '대차대조표'로 표기한다. 삼성물산이 괄호를 이용해 두 명칭을 함께 쓰는 것은 상법을 그냥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IFRS 전면 도입 이후 14년이나 흘렀는데 동일한 내용을 담은 표의 명칭조차 통일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치게 우유부단한 행정이다.

대기업에 부정적인 시민단체가 애용하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회계 투명성 평가도 회계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63개 국가를 대상으로 여러 항목을 조사하는데 이 중에 회계 투명성(Auditing and accounting practices)이 한국에서는 최대 관심사다. 설문 방식의 조사인데 응답자는 국내 또는 외국 기업에 종사하는 국민 또는 해외 거주자로 해당 국가에서 생활하며 인지한 경험으로 현재와 미래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회계 관련 사항을 회계 전문성과 상관없이 일반 응답자에게 다른 여러 항목과 함께 묻는 방식이다. 상식 수준의 언론 보도가 전문 영역인 회계 투명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조사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전문가도 많다.

IFRS 전면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2006년 노무현 정부의 금융위원회 정책 브리핑에 담겨 있다.

1. IFRS 전면 도입 14년 ... 韓 회계, 국민 신뢰 얻었나

IFRS 홈페이지에 '채택 주체의 경험'으로 지금도 게시 중인 2016년 한국의 헌사는 노골적이다. 유럽연합(EU), 호주, 한국의 경험이라며 3개 주체의 헌사가 게시됐는데 유럽연합은 자본시장의 공통 언어 창출, 호주는 상장회사에 긍정적 효과로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한국은 자기 비하 문구까지 동원돼 웃기는 수준이다. "IFRS 채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해외 주식 상장과 채권 발행 및 인수·합병(M&A)을 통한 자본 유치에 있어서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이는 데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헌사 게시 다음 해인 2017년에 한국이 받은 IMD 투명성 평가는 63개국 중에 63등으로 꼴찌였다.

사실 횡령과 같은 자금 사고가 더 문제다. 주범 이외의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효과적인 내부 고발제가 활용되지 못한 것이 화근이다. 수치 간의 논리적 연결을 따지면 부정과 오류의 단초를 찾을 수 있는 회계의 본질적 구조를 활용해 감시에 나서야 한다.

부서 인원 모두의 업무를 일시에 정지하고 불시에 조사하는 방식 등 조사 기법을 고도화해야 한다. 공인회계사회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검증된 회원을 골라 특별팀을 운영하고 적발된 사례는 상세히 기술해 공유해야 한다. 회계 개혁 효과에 대한 홍보가 활발했던 2021년에 37위까지 올랐던 IMD 평가가 2022년에는 53위로 16등이나 추락했는데 이는 우리은행과 오스텨임플란트의 거액 횡령 사건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1. IFRS 전면 도입 14년 ... 韓 회계, 국민 신뢰 얻었나

전문가 판단을 중시하는 원칙 중심 기준으로 바꾸고도 규칙 중심 감리 방식을 버리지 못한 것도 문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에 대한 오랜 감리와 형사재판도 불신 요인이다. 파생상품과 연결회계가 결합된 고난도 판단 영역의 회계 처리에 두 달 정도의 결산과 현장감사를 수행한 회사와 감사법인을 상대로 8년간이나 감리와 형사재판을 계속하는 것은 지나치다.

최근 법정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보면 그 당시에는 아예 없었던 논리를 새로 개발한 것도 눈에 띈다. 미래에 등장할 이론까지 예측한 회계 처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

현재 IFRS를 전면 채택한 주체(jurisdiction)는 145개다. 국가 단위가 아니라 회계 관할권으로 세분해 유럽 각국과는 별개로 유럽연합도 채택 주체로 카운트한다.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대부분 유럽 주변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 다수가 전면 채택했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은 전면 채택을 보류했고, 캐나다는 전면 채택이지만 미국 기준도 동시에 채택하는 양다리 포지션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한국이 가장 의미 있는 전면 채택 주체임이 분명한데 IASB 위원에서는 빠지는 수모를 겪고 있다. 2012년부터 8년간 유지하던 위원직을 2019년에 놓친 것이다. IASB 위원은 지역별로 배분해 유럽,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오세아니아 포함) 각각 4명과 아프리카 1명 및 위원장 1명을 합쳐 14명으로 구성한다. 현재 아시아-오세아니아 쿼터는 이스라엘, 호주, 중국,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미채택 주체인 중국과 일본은 포함됐고, 한국은 빠졌다. 보험회계와 같이 업계의 생존이 걸린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한국인 위원 부재에 따른 어려움은 심각하다.

1. IFRS 전면 도입 14년 ... 韓 회계, 국민 신뢰 얻었나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할 기준 설정은 회계의 핵심 과제다. 그 나라의 법제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기준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미국은 1997년부터 IASB와 기준 조화(harmonization)를 논의하고 있지만 통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분위기며 일본도 미국과 같은 입장이다. 기업 규모에 비해 IFRS 회계 부담이 과중한 중견기업과 낮은 지분율로 얽혀 결과를 해석하기도 힘든 소규모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조정하는 개선책이 시급하다.

국제적 원칙이 추구하는 방향은 지키면서 자국의 환경에 맞는 회계 기준 설정이 합리적이다. 유럽계 국가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에 대해 미국 등이 전면 채택을 보류한 이유를 우리도 참조해야 한다.

2. '경제 파이' 키우나, 먹고 끝내나... "문제는 세제야!"

매일경제 2023년 2월 22일자
「'경제 파이' 키우나, 먹고 끝내나... "문제는 세제야!"」

- 뒷걸음 경제 원인은 세금
 - 올해 성장률 전망 1.7%로 '뚝'
 - 저성장 대명사 日보다 낮아 굴욕
 - 징벌적 과세·부자감세 프레임 등
 - 정치권은 표 위해 세제 주물러
- 2017년에 운명 갈린 韓美
 - 트럼프, 야당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 법인세 최고세율 14%P 전격 인하
 - 文정부는 되레 3%P 올려 '역주행'
 - 기업투자 줄고 일자리는 고갈
- 감면규정마저 '그림의 떡'
 - 1991년 만들어진 최저한세
 - 기업이 연구비 깎는 부작용 초래
 - 면세 적용 많은 부가가치세는 유럽식 낮은 세율로 수정 필요
- 국가재정 '양대 축'에 균형을
 - 세금·복지 따로 나눠 논쟁하면 불필요한 혼란만 계속 불러
 - 증여·상속세 등 기업 부담 줄여 나눌 파이 키우는게 당면 과제

2. '경제 파이' 키우나, 먹고 끝내나... "문제는 세제야!"

코로나 3년의 '의외의 패자'는 한국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2023년 세계경제 전망치를 당초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은 2.0%에서 1.7%로 오히려 낮췄다. 저성장의 대명사인 일본의 1.8%를 밀도는 국제적 망신 수준이다. 일본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은 IMF 구제금융으로 연명하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엉망으로 망가진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리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노동·교육으로 이어지는 개혁과제 중에서 노동개혁은 성장잠재력과 직결된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과 노동조합 회계장부 투명성 확보를 통해 생산적 노사관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영리 추구가 주된 목적인 기업은 미래 수익에 따른 세금을 정확히 따져 투자를 결정한다. 기업주는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할 때 부담하는 증여·상속세에도 민감하다. 기업 세금을 줄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분배할 파이를 키우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근로자 중에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너무 낮은 것은 한국 재정의 한계다. 소수의 부동산 부자에게 재산세에 추가해 징벌적 세금을 더 거둬 나누겠다는 종합부동산세 발상은 처음부터 문제였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납세자 수가 급증함으로써 세금 인상에 책임이 있는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몰아붙이는 행태도 문제다. 기업 세금을 올리면 투자 여력은 줄고 일자리는 고갈된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면 세계 최악의 저출산 참사는 더욱 심화된다.

2. '경제 파이' 키우나, 먹고 끝내나... "문제는 세제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계획에 없던 대선을 치른 2017년은 미국과 한국의 법인세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35%를 21%로 대폭 낮추면서 최저한세를 폐지했다. 같은 시기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개정을 강행했다. 법인세 인하라는 국제적 추세에 완전히 역주행한 '홀로인상'을 놓고 문 정부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핀셋 증세'라고 홍보했다.

미국의 법인세 인하는 높은 세율을 피해 해외로 옮겼던 사업장의 국내 귀환을 이끌었고 해외에 쌓아놓았던 이익금의 국내 송금은 급증했다. 풍부한 기업자금은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다. 한국의 구도는 미국과 정반대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대기업 대부분에 적용될 법인세 3%포인트 인상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더욱 부추겼고 해외 이익금의 국내 반입도 줄어 국내 투자와 고용 부진은 더욱 심화됐다.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역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 곳곳에 한국 대기업 공장이 건설 중이지만 미국 기업의 국내 공장 건설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를 시도했다. 다수 의석의 거대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야유했고, 결국 1%포인트 인하로 주저앉았다.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법인세율은 IMF의 성장률 예측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을 것이다. 영국 19%, 독일 15%, 일본 23.2%, 프랑스 25%가 현행 법인세율이다. 대부분 나라가 단일세율이고 일부는 2단계 세율 구조를 쓰고 있는데 한국은 4단계 초과 누진 구조로 지나칠 만큼 복잡하다. 부자인 대기업이 더 내고 중소기업은 덜 낸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전시용 세율체계다.

2. '경제 파이' 키우나, 먹고 끝내나... "문제는 세제야!"

높은 세율과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감면 규정도 문제다. 감면 한도를 옥죄기 위한 최저한세도 생뚱맞다. 최저한세는 민주화 이후 조세감면 요구가 빗발쳤던 노태우 정부에서 1991년에 처음 신설했다. 감면이 아무리 많아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원래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도입 당시 12%)만큼 부담시키는 제도다.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17%까지 올렸고 중소기업은 도입 당시보다 낮췄다. 최저한세 회피를 위한 역선택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이만우·심준용은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에서 대기업의 경우 최저한세에 걸리면 힘들고 성공 확률이 낮은 연구비(인력개발비 포함)부터 줄이는 경향을 입증했다. 손쉬운 감면 대상인 악화가 성장잠재력을 이끌 양화인 연구비를 밀어내는 '그레שמ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연구비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다. 중소기업이 최저한세에 걸리면 일부 감면 대상 지출을 줄여 최저한세 적용을 회피하고 절약된 돈으로 오히려 연구비를 늘리는 현상이 발견됐다.

조세감면제도 운영에도 문제가 많다. 감면 대상 지출 집행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다가 한참 후 세무대리인에게 듣고 부랴부랴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한다.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면 비법을 코치한 세무대리인을 내세워 불복청구를 제기한다. 특정 지출을 유인하려는 감면 목적을 집행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는데 사후에 세금을 돌려주는 불합리한 세정은 바로잡아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와 최저한세율 17%의 차이인 7%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세법체계에서 미국 수준의 획기적 투자세액공제는 '두루미 접시에 담긴 수프'처럼 웃음거리다. 반도체는 부품 수명 주기가 짧고, 설비 활용기간의 예측이 극히 어렵다. 투자 단계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주려면 상당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시에 제공해야 한다.

2. '경제 파이' 키우나, 먹고 끝내나... "문제는 세제야!"

그러나 한국 고유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최저한세 때문에 다른 감면 항목을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으로 끝난다. 최저한세 구조조정이 반도체를 비롯해 미래 먹거리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설비투자 감가상각에 대한 세법 규제도 혁신해 미국 세법 수준의 신속한 손금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기업 경영권 상속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도 변수다. 중소기업으로 창업해 대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기업주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크다.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고 경영권 할증분을 포함하면 65%까지 치솟는다. 소규모 가업 상속에 대한 조건부 특례가 있긴 하지만 성장잠재력을 키우려면 근본적 방향 전환이 선결돼야 한다. 상속이든 증여든 현금 자산으로 받지 않고 경영을 계속하기 위해 주식으로 받아 보유하면 처분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주택에서 현금 수입이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종과하는 것은 무리다.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료 수입을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납부한다. 재산세를 납부할 수입 자체가 없는 계층의 사정을 감안해 재산세의 급격한 인상은 막아야 한다.

복지 확대의 전제는 안정적 조세수입이다. 주요 세원은 법인세·소득세·재산세이며 상속세·증여세는 세율은 높지만 납부 인원이 많지 않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부가가치세는 1977년 도입 당시의 기본세율 1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州)별로 판매세(Sales tax)를 운영한다. 매입세액공제가 없는 미국 판매세를 부가가치세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미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율 평균은 19.5%다. 유럽 국가는 헝가리 27%를 비롯해 이탈리아 22%, 영국과 프랑스가 각각 20%로 높은 수준이고 한국과 일본은 10%다.

2. '경제 파이' 키우나, 먹고 끝내나... "문제는 세제야!"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인 기본세율이 낮으면서도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도 지나치게 많다. 유럽에서는 2단계 세율 구조를 활용해 미가공 식료품에도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데 유럽의 저세율 과세 대상 대부분은 한국에서는 면세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지속적 인상 기조와 달리 부가가치세 세율은 그대로 유지됐고 면세 대상은 계속 늘어난다. 과세를 면세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 종전 부가가치세법에서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은 과세이고 시외버스는 면세였다. 시외버스가 영동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이용하는 것을 알아챈 강릉세무서 조사관이 고속도로 구간에 적용될 부가가치세를 안분계산으로 발라내 가산세를 보태 추징했다. 조세심판 단계에서 인용됐지만 과세당국으로서는 난처하게 됐다. 세제실은 곧바로 여객운송용역 중 버스는 시외 우등고속만 제외하고 모두 면세되도록 개정했다. 문제는 버스구입대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다. 면세용역이 되면 버스의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2년 동안 사용하면 그냥 챙길 수 있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길이 막혔다. 근래에 와서 우등고속이 훨씬 많이 눈에 띄는 것은 면세용역 매입세액불공제를 회피하려는 자구책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면세를 사업자가 직접 나서서 반대하는 비정상적 상황도 생긴다. 작년 7월부터 정부는 한시적으로 김치와 간장 등 장류에 대해 비닐 포장은 물론이고 병이나 캔 제품까지 면세하는 조치를 내놓고 기존의 매출세액만큼 낮은 가격으로 팔도록 감독하고 있다. 공급업체가 매입세액불공제로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을 보충할 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다. 업계는 면세 취소를 읍소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안절부절 못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을 챙길 동기도 줄어들었다. 유럽식 낮은 세율을 도입해 면세를 대폭 정리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2. '경제 파이' 키우나, 먹고 끝내나... "문제는 세제야!"

스페인이 천연가스 부가가치세 21%를 5%로 일시 인하한 방식과 같이 복수 세율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율도 적절히 인상해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국가 재정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여야 한다.

국가 재정의 양대 축인 세금과 복지는 함께 고려할 사항이다. 이슈 하나씩 따로 논쟁하다 보면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된다. 지하철 경로 운임 축소와 관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은 야당이 대응을 극도로 자제하는 가운데 '무상급식 시즌2'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세금 연금 복지를 함께 고려한 빅픽처를 위해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 사무총장 신년간담회에서 이광재 총장은 무분별한 의원 입법을 막기 위한 규제영향평가 도입 의지를 밝혔다. 입법 로비가 집중되는 조세감면을 비롯한 세제가 우선적 과제가 돼야 한다. 지역 구도상 승산 없는 강원도지사 후보로 총대를 메지 않았다면 지금도 의원석에 앉아 있을 이 총장의 결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